

# 'EU의 기델 언덕' 독일마저 中에 등 돌리나

## 獨 새 연립정부, 메르켈과 달리 反中 노선 예고

바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독일 새 연립정부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과는 다른 길을 걸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중심점 독일이 중국의 인권 침해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커 중국·EU 관계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24일(현지시간)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2월 초 메르켈이 물러나고 원내 1당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대표가 새 총리로 선출된다.

이날 공개된 새 연정의 정책 협약 내용을 보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침해, 홍콩 인권, 대만 관련 상황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했다. 먼저 "인권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인권을 앞세웠다. 이어 "민주주의적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양안(중국·대만)이 동의해오던 현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침해를 명확하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요즘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는 미국과 거의 똑같은 태도를 취한 셈이다.

새 연정 구성원들은 또 "중국이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일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좌파 성향 내달 솔츠 총리로 신장 인권·대만 문제 등 직접 거론 및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 커 EU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지지 中과 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반대 정부 요직 거론 후보도 반중정서 "시진핑 치하의 중국 우려 더 커져" 선언을 그었다.

"EU의 제안처럼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 수입금지를 지지한다"며 'EU·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도 현재로선 비준할 수 없다'고 중국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EU는 최근 회원국 대사들의 논의 끝에 신장 지역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리 4명과 기판 1건 등에 대한 기존 제재 연장에 합의했다. 회원국 장관들의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독일 새 정부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할 인물들의 반중 정서도 강하다. 녹색당 공동대표 아날레나 베어보크와 로베르트 하베르크는 각각 외무장관, 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녹색당은 중국·러시아 등에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장관 물망에 오르는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메르켈의 대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의 EU·중국관계 전문가 노아 바킨은 "독일 새 정부 내에서 시진핑 치하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언급한 것은 중국과의 차이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獨 연정협상 타결 독일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한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24일(현지시간) 연정 협상 타결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자유민주당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대표, 녹색당 아날레나 베어보크, 로베르트 하베르크 공동대표. 원내 1당인 사회민주당 대표가 새 총리를 맡게 된다. 베를린=AP통신

## 英·佛해협서 난민 보트 침몰 최소 27명 숨져

英, 육로 단속 강화·해상 이용 늘어 존슨 "참담"… 마크롱 "책임자 적발"

이진희 기자 aaaa3469@segye.com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불해협에서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가 침몰해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밀항하려던 소형 보트가 프랑스 북부 칼레항 앞바다에서 침몰해 27명이 숨졌다. 프랑스 당국은 최초 발표에서 31명이 희생됐다고 했다가 27명으로 수정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 5명과 여아가 1명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 아 프리카나 중동 국가 난민들이 선호하는 망명지다. 동시에 직업시장에서 불법체류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영국 당국이 육로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난민들 단속을 강화하자 풍선호 고무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난민이 늘었다.

프랑스 당국은 올해 영불해협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4만7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영불해협에서 발생한 난민들의 인명피해 규모

중 최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밀입국을 지원하는 인신매매 조직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불해협이 묘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를 적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국은 상대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존슨 총리는 "프랑스가 난민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은 이 문제를 자국 정치에 활용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지적했다.

## 독재자 카다피 아들 리비아 대선 출마 불발

선관위 "범죄로 유죄 선고 때문"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리비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1942~2011) 아들의 대선 출마가 불발에 그치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리비아 선거 관리위원회는 카다피 차남 사이프 알아슬람 카다피(49·사진)가 다음달 24일 실시될 예정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반군에 붙잡혀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됐다.

리비아 선거법엔 후보자들이 불명예스러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아야 하며 전과 기록이 깨끗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알아슬람은 지난 14일 "아버지가 실각한 뒤 10년간 분쟁을 겪은 리비아에 통합을 가져오고 싶다"며 대선 후보로 등록해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다. 이에 리비아 동부 지역 원로들이 반발하면서 대선 보이콧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대선 후보로 등록된 98명 가운데 알아슬람 외에도 24명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당했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10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선 동부 지역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과도정부 총리, 파티 바사가 전 내무장관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공시송달공고(2차)

1. 다음 표의 재산에 대하여 그 보기를 수용할 자(파수승계)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일승수계 등)에게 수의제약하고 하오나 해당 관계인은 마지막 공고일로부터 지정 기간 이내에 배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간 수의제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제약권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Table with columns: 公 告 項 目 (Announcement Item), 公 告 日 期 (Announcement Date), 公 告 場 所 (Announcement Location), 公 告 內 容 (Announcement Content), 備 註 (Remarks).

2. 수의제약 신청서(유선 요청서 별도송부)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주소 이용사항 전부 기록된 것) 다, 기타 파수승계 또는 상속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결문, 가족관계증명서, 계적등본 등)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Main table for public notice of state property, listing various assets and their details.

Main table for public notice of state property, listing various assets and their details.

※ 일부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지면 및 면적 변경 있음